

남북관계 경색의 경제·사회적 비용

김영운

(사)남북물류포럼 회장

목차

- I. 문제제기
- II. 남북관계 경색의 부정적 경제효과
- III. 남북관계 경색의 기회손실 비용
- IV. 남북관계 경색의 대내외적 파급효과
- V. 결론

1. 문제제기

○20년이 경과한 남북경협을 되돌아보면서 필자는 오늘 우리는 중대 기로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함.

-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 그동안 애써 성취한 남북 경협을 동력을 확대할 수도, 상실할 수도 있음.
- 남북경협의 동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상당한 유무형의 국부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됨.

○과거 남북경협을 확대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대북 정책적 목표, 즉, 북한의 변화(비핵과 개방)는 이제 남북경협 추진의 전제가 되었음.

○북한 변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지난 10년의 대북 정책과 남북경

협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함.

- 과거의 대북 정책이 “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식을 갖게 했으며,”
- 경협이 진전에 비해, 평화·안보 분야의 진전은 불만족한 수준이며,
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(개혁·개방)이 가시화되지 못해 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점” 등의 비판적 인식의 근거임.
- 한마디로 ‘기존의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’는 것이 청와대를 비롯한 통일부의 생각

○이 같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저에는 “대북 상호주의”가 자리 잡고 있으며, 이의 핵심은 「비핵·개방·3000」을 기반으로 하는 「상생·공영」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음.

○남북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함.

- 동서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으며, 이를 기반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음.

○그러나 「비핵·개방·3000」은 남북한간의 문제로만 처리되기 어려운 국제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, 보다 더 구체적인 면을 담아야 할 부분도 있음.

- 첫째,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포함, 미·북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체제보장이 담보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기도 함.
- 둘째, 북한의 ‘개방’은 그 정도와 수준면에서 구체적이지 못함.

○북핵 문제가 국제관계에서 해결될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, 남북 사이의 상호주의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○더 나아가 ‘개방’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,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임.

○상호주의에 입각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의해 100% 수용되는 성공을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함.

- 협상의 논리상 양 쪽의 요구가 적당히 수렴되는 차원의 타협이 이루어지게 마련임.
- 다만,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며, 그와 같은 희생은 대북 정책이 비록 성공한다고 해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임.
 - 남북관계 냉각에 따른 대북 투자기업의 손실, 이산가족의 고통 등
- 이런 점에서 정부는 대북 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인 창출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대북 정책을 개선·보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요구됨.
- 대북 정책의 성과가 장기간 창출되지 못할 경우,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국 대북 전략과 관련된 정부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상황에 초래할 수도 있음.
 -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했던 여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북 관계를 국익 차원에서 조망,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대북 정책을 비판하게 될 것임.
 - 이전 정부가 북한을 ‘변화’ 시키기 못했기 때문에 추진한 정책이지만, 이 또한 나라 전체 차원에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, “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렇게만 놓아둘 것인가?” 또는 “새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”라는 불만과 조소(嘲笑)로 이어질 수 있음.
-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남북 경색 관계가 지속될 경우, 그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가 국익차원에서 손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함.
- 남북 경색관계를 개념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직·간접적 파급효과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제시함.
 - 남북 경색관계에 따라 나타나게 될 남북경협상의 부정적 경제효과
 - 남북경협이 활성화하지 않음으로써 남한이 안게 될 경제적 기회손실
 - 남북 경색관계에 따라 안게 될 기타 정치·사회적 부담 등

II. 남북 관계 경색의 부정적 경제효과

1. 남북교역의 경제적 이익 상실

- 그동안 양적으로 발전해 온 남북교역은 남북 경색관계에 따라 후퇴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.
- 남북교역은 지금까지 그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업적 교역 형태로 ‘다양화·건설화’되었음.
 - 남북교역의 규모는 1989년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, 2007년 남북교역은 17억 9,800만 달러로 지난 19년 동안 90배 이상 성장
 - 개성공단사업 추진,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, 북한산 농수산물 및 광산물의 반입 증가 등으로 기존의 대북 지원 중심의 교역에서 상업적 베이스로 ‘건설화’되었음.

<표-1>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

▶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(최근 5년) 〈단위 : 백만불〉

남북교역 유형	2004	2005	2006	2007	2008.2
반입 : 일반교역 - 위탁가공	258	320	441	645	102
반입 : 경제협력 (개성공단·금강산관광·기타·경공업협력)	0	20	77	120	27
반입 : 비상업적 거래 (정부·민간지원/사회문화협력/경수로사업)	0	0	1	0	0
반입 합계	258	340	520	765	129
반출 : 일반교역 - 위탁가공	89	100	116	145	24
반출 : 경제협력 (개성공단·금강산관광·기타·경공업협력)	89	250	294	520	96
반출 : 비상업적 거래 (정부·민간지원/사회문화협력/경수로사업)	261	366	421	367	10
반출 합계	439	715	830	1,032	130
남북간 실질교역 수지(경제협력 - 비상업적 거래 제외)	△168	△221	△326	△500	△78

- 2007년 상업적 교역량도 2006년에 비해 54.2% 증가, 전체 교역의 79.6% 차지
 - 상업적 거래의 증가는 북한의 자연자원 반입이 증가된 때문: 아연피 전

- 년대비 32.8%, 모래 92.7%, 무연탄 8,006%, 선철 2,230% 증가
- 개성공단건설용 자재 및 입주공장 생산원료 반출 증가: 반출액: 3억3,950만 달러 전년대비 52.3% 증가, 경공업 원자재(7,250만 달러) 반출

<표-2> 남북 거래유형별 교역 현황(2007년)

대구분	중구분	소구분	금액 (증가율)		
			반출	반입	합계
상업적 거래	교역	일반교역	20,167 (△9.0)	441,244 (56.4)	461,411 (51.7)
		위탁가공교역	125,393 (34.0)	204,519 (28.3)	329,912 (30.4)
		소 계	145,560 (25.7)	645,763 (46.3)	791,323 (42.0)
	경제 협력 사업	개성공단사업	339,498 (52.3)	101,179 (33.2)	440,677 (47.4)
		금강산관광사업	98,929 (74.8)	15,825 (18,301.1)	114,754 (102.5)
		기타경제협력사업	10,618 (△26.8)	1,296 (27.1)	11,914 (△23.2)
		소 계	449,045 (52.7)	118,300 (53.5)	567,345 (52.9)
	경공업 협력사업		71,271 (-)	1,234 (-)	72,505 (-)
	합 계		665,876 (62.5)	765,297 (47.6)	1,431,173 (54.2)
	비상업적 거래	대북 지원	민간지원	250,034 (△38.6)	14 (△56.2)
정부지원			78,854 (574.1)	2 (0.0)	78,856 (574.2)
소 계			328,888 (△21.5)	16 (△50.0)	328,904 (△21.5)
사회문화협력사업		897 (△30.6)	33 (△97.0)	930 (△61.4)	
에너지지원		36,889 (-)	0 (0.0)	36,889 (-)	
합 계		366,674 (△12.8)	49 (△95.7)	366,723 (△13.0)	
총 계		1,032,550 (24.3)	765,346 (47.3)	1,797,896 (33.2)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○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교역이 정체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.

○2008년 7월 중 남북교역액은 180,748천 달러로 전년 동월 183,564천 달러에 비해 1.5% 감소

- 상업적 거래는 174,387천 달러(96.5%)로 전년 동월 135,367천 달러

(73.7%) 대비 28.8% 증가하였으나,

- 비상업적 거래는 6,361천 달러(3.5%)로 전년 동월 48,197천 달러(26.3%) 대비 86.8% 감소했음.

○그러나 2008년 7월 중 순수교역액(위탁가공교역 및 경제협력 제외)은 39,597천 달러로 전년 동월 59,601천 달러 대비 33.6%나 크게 감소

- 반입(33,903천 달러), 반출(5,694천 달러)로 각각 85.6%, 14.4% 차지

○대북 교역량 감소는 타 분야의 경제협력사업과는 달리 남한 교역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.

- 대북 교역은 철저한 수익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분야임.

2. 북한의 대남 경제적 의존도 감소

○남북한간의 교역증가는 남한이 북한의 제2교역국의 위치를 확보하게 하는데 기여했으며, 북한의 대남교역 의존도를 제고시켰음.

- 1993년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가 0.3%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에는 31.0%로 크게 상승

<표-3> 북한의 교역 총액 및 대남 교역의존도

구 분	00년	01년	02년	03년	04년	05년	06년
무역총액(억\$)	19.7	22.7	22.6	23.9	28.6	30	30
남북교역액(억\$)	4.3	4	6.4	7.2	7	10.6	13.5
교역의존도(%)	17.9	15.0	22.1	23.2	27.3	26.1	31.0

자료: 한국은행 * 남북교역은 민족 내부거래로 북한 무역규모에 未포함

○이와 같은 교역의존도는 상당부분 남한에서 원·부자재 형태로 제공된 물자가 북한 지역에서의 위탁가공을 거쳐 완제품 형태로 재 반입하는 데 기인

○위탁가공교역은 북한에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비, 원부자재의 전

부 또는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고, 가공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교역임.

○ 남북간의 위탁가공교역은 그동안 꾸준히 그 비중을 높임으로써 남북교역에 확고한 자리로 매김되었으며, 남북한간 교역사업의 모델로 정착되는 성과를 가져왔음.

- 1993년 위탁가공교역이 전제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3.8% 정도였으나 2007년에는 18.3%를 차지
- 거래성교역에 대한 비중은 1993년 3.8%에서 2007년 23.1%로 높아졌음.

○ 2008년 7월 중 위탁가공교역액은 39,977천 달러로 전년 동월 30,038천 달러 대비 33.1% 증가

- 반입은 18,697천 달러, 반출은 21,280천 달러로 각각 46.8%, 53.2% 차지
- 품목별 구성: 석유류(83.1%), 농림수산물(7.6%), 전자전기제품(5.6%) 순

○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 면에서 볼 때, 석유류 분야가 남한과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로 평가됨.

○ 개성공단의 생산도 대부분 넓은 의미에서 설비제공 임가공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, 석유류 분야에서 타 분야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○ 그러나 남북간의 경색관계는 이와 같은 교역의 비중을 약화시켜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를 저하시킬 것임.

- 이는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레버리지(Leverage) 효과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.

3. 개성공단 진출 및 진출 희망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

○ 투자를 동반한 협력사업은 1994년 11월 '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' 이후

부터 가시화

- 2008년 3월 현재 대북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 수는 343개에 달함.
 - 이의 대부분은 2004년 개성공단 조성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.
 - 그러나 2008년 들어 경제협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.

<표-4> 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추이

▷ 남북 경제협력사업(자) 승인 현황

<단위 : 건>

구분	'91-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.3	계
협력사업	16	2	5	2	2	26	38	23	176	20	310
협력사업자	42	1	6	3	4	28	38	24	176	21	343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-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한 이후 시범단지조성,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, 현재 1단계 100만평에 대한 2차 분양(2007.4) 완료 상태임.
 - 1단계 기반시설 공사, 용수시설, 폐수처리장,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었으며,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 공사, 653회선의 전화와 FA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아파트형 공장 등 총 79개 기업이 가동중임(2008.8말 현재).
 - 누적생산액: 3억 7,383만 달러,
 - 총 수출액: 7,919만 달러(누적 생산액의 21.2%)
- 북한측 근로자 3만 3천여 명, 남한측 근로자 1,300명 근무(2008.8. 현재)
 -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공단 가동이 완료되는 2009년 말에는 6~8만 명의 인력 근무할 것으로 예상
-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 추진 협의중심지로서도 역할하고 있으며, 그와 같은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나, 2008년 들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<표-5>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사업협의 건수 추이

▶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사업협의 현황 - 사업형태별 현황 <단위: 건>

구분	2005	2006	2007	2008.3	합계
협력사업	16	131	94	18	259
위탁가공	13	222	316	37	588
일반교역	9	69	64	11	153
기타	5	24	36	6	71
합계	43	446	510	72	1,071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- 2단계 개발은 개성시 봉두리 일원, 7,799천㎡(236만평) 개발, 입주기업 700여개 입주시 고용인력 20만 명으로 예상
 - 노동집약적 업종이 아닌 '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입지하는 복합 산업단지'로 개발 예정
- 제2단계 150만평의 입주가 완료 및 250만평 전체 가동시 약 28억 달러 생산, 11억 5천만 달러 부가가치효과 창출 전망
- 개성공단 총 2,000만평 개발은 중국과 남한 여느 공단에 못지않은 대규모 공단개발을 의미(청도: 10만평, 베트남: 100만평, 한국남동공단: 300만평, 시화공단: 500만평, 구미공단: 700만평, 창원공단: 800만평)
-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,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, 남북이 공히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추진되는 협력사업이자, 긴장의 대결지역을 화해와 평화지역으로 변모시켜 가는 사업임.
- 개성공단 개발은 지역경제에 대한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, 북한산업, 기술변화, 국토발전, 생활여건변화, 대외관계변화 등에 이르는 간접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.
 - 개성권역의 변화, 북한 주민의 소득증대, 전반적 도시발전 효과와 함께,
 - 남북경협이 중심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-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 경색관계로 난관에 부딪혀 있는 형편임.
- 북측으로부터 인력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 진출 기업은 물론, 1 단계 분양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.
- 이는 결국 남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,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제차원에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시킬 것임.

4. 남북경협외 경제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 지연

- 한국무역협회가 설문조사(2008.4)한 결과에 의하면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3통(통행·통신·통관)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.
- 3통 문제의 해결은 향후 개성공단 개발의 관건이기도 함.
 -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, 품질검사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북절차 간소화, 남측 기술자의 북한 상주, 생산현황에 대한 북측으로부터 신속한 정보, 육로운송개통, 고물류비 등 남북 물류문제 개선이 중요 해결 과제임.
- 개성공단 건설 및 이와 관련된 3통 문제는 해결 기반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으나, 남북관계 경색으로 그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.
 - 북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, 숙소건설, 근로자 출퇴근 도로 확충 및 통근 열차 운행 문제 합의
 - 통행 시간 확대, 전자출입체계(RFID) 남북간 연계·적용, 출입업무와 출입심사 간소화, 선별 통관검사 전환 합의
 - 2008년 내 인터넷과 무선전화 서비스 제공
 - 남측 근로자 4대 보험 적용
 - 기술교육센터 건립 등

○ 남북간 분쟁해결 수단 문제

- 북측과 분쟁 발생시 피해 감수, 차기 협력 사안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해결
- 분쟁해결이 3통 문제 해결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로 인식
- 남북간 합의된 「남북상사중재위원회」 설치·운영 등도 지연

○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외 경제성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.

5. 대북 투자자산 확보의 불안정성 증대

○ 남한의 대북 투자는 현재 수십억 달러에 달하나, 남북한 관계가 위기상황에 직면할 경우, 북한 당국은 남한의 대북 투자자산을 동결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등 극단적 조치들을 취할 개연성이 높음.

-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설비 반출에 대한 북한의 거부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

○ 이 같은 경우 북한에 투자한 남한의 기업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것임.

- 남북 관계 경색은 대북 투자자산에 대한 북한의 몰수 등과 같은 위협을 차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하시킴.

III.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기회손실

○ 2007년 10·4 선언을 통해 합의된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의 대부분은 중단,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.

○ 중단된 남북경협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·정리할 수 있음.

<물류운송분야>

- 개성-신의주 철도 및 개성-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

- 안변, 남포 배수리 공장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, 선박블록공장 건설
- 서울-백두산간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

<경공업·지하자원 협력>

-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단천지역의 검덕 연·아연광산,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 3개 광산 개발

<수산업분야 협력 및 「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」>

-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(2005.7.25~27, 개성) 후속 작업: ①서해수역에서의 공동어로사업 추진, ②서해상의 제3국 불법어선 조업방지, ③수산물 생산·가공·유통 분야의 협력, ④수산분야 기술교류협력, ⑤우량품종 개발의 공동추진, ⑥제3국 어장진출을 위한 협력
- 서해평화협력지대설치: 직항로개설, 해주항 이용, 해주경제특구건설, 한강하구이용
- 한강하구 개발 추진 여건 조성: 담수호 조성, 산업용수 생산, 간석지 매립산업용지 확보 등

<북한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개발협력형 농업사업>

-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(2005), 2007 정상선언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등을 통해 북 협동농장 선정, 육묘시설, 비료, 농약, 농기계 등 농기자재, 배합 사료, 종자생산과 가공시설, 우량 유전자원교환, 육종 및 재배기술 협력, 생물농약 개발·생산,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 확립, 산림녹화를 위한 양묘장 조성,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, 축산, 채소 등 농업분야의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

○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경협사업 이행을 위한 필요 투자비용은 총 약 10조 7,000억 원(111.8억 달러) ~ 15조 2,000억 원(158.7억 달러)으로 추정(별도 계산)

<표-6> 경협 분야 필요 투자비용 추정

구 분	기 간	총 필요 투자비용	연평균 필요 투자비용
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	5~10년	46억~92억 달러	9.2억 달러
개성공단 2단계공사	3년	24.8억 달러	8.3억 달러
SOC 확충	3~5년	22.4억~23.3억 달러	5.5억~5.8억 달러
백두산 관광 개발	6년	12.6억 달러	2.1억 달러
환경보호·조림사업	3년	1.95억 달러	0.66억 달러
농업개발	3년	4억 달러	1.3억 달러
총 계		111.8억~158.7억 달러	최대 27.0억~27.3억 달러

○상기 투자비용이 남한 경제에 주는 부담은 시초 년도 경우, GNI 대비 최대 0.3 %, 재정규모 대비 1.8% 수준

<표-6> 향후 10년간 기간별 대북 투자 부담률 변화 전망 (단위 : %)

구 분	1차~3차년도	4차~5차년도	6차년도	7차~10차년도
GNI 대비	0.30~0.31	0.16	0.13	0.10
재정규모 대비	1.78~1.80	0.95	0.75	0.61

주: 2006년 현재 남한 GNI 및 재정규모 기준

○참고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(DAC) 22개 회원국의 경우 GNI 대비 평균 ODA 비율은 0.25%(연간 2조원 수준)이며,

- UN의 권고 수준은 GNI 대비 0.7%(5.5조원 수준)
-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통일 시점까지 연평균 59억 마르크(연평균 3조 2천억 원, 서독 GDP의 2.9%(통일 직전 1989년)에 달했음.

○2007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,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9.3~407.5억 달러(25.7조~38.9조 원) 규모로서 투입 대비 1.7배~3.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음.

- 또한 동 사업 추진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3.3억~172억 달러(10.8조~16.4조 원)에 이를 것임.

<표-7> 대북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

(단위: 억 달러)

구 분	기 간	생산유발효과	부가가치유발효과
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	5~10년	136.7~273.4	58.2~116.4
개성공단 2단계공사	3년	73.7	31.4
SOC 확충	3~5년	33.6~35.1	13.0~13.5
백두산 관광 개발	6년	18.9	7.3
환경보호·조림사업	3년	2.9	1.1
농업개발	3년	3.5	2.3
총 계		269.3~407.5	113.3~172.0

○대북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26.9억~40.8억 달러로, 초창기에는 연간 12억~13억 달러 수준의 불과하던 생산유발효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띠게 되어 사업 후반기에는 최대 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

○남한 경제 전제적으로는

- 연 평균 27.3억 달러 대북 투자시 남한 경제에는 연 평균 0.2~0.3%의 후생부문 성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.
- 이와 같은 후생부문 증가는 금액 표시(2000년 실질가치)로 122.3억~183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임.

○후생부문의 증가는 연간 7.32억~10.98억 달러의 임금소득으로, 이는 3만~4만 6천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임.

○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.

IV. 남북 관계 경색의 대·내외적 파급효과

1. 국가 대외 신인도 저하

○남북관계 경색 심화에 따른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이른바 ‘코리아 디스카운트’ 또는

한국의 '컨트리 리스크(국가 위험도)'를 높이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.

○ 국가 신인도의 저하는 남한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키며, 국내외 증권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가치(주가) 하락에 따른 국가 자산가치의 감소, 해외자금유입 규모의 감소 및 형태 악화를 가져올 것임.

- '컨트리 리스크'의 증가에 따라 장기투자자금보다는 단기투자자금, 직접투자자금(생산부문)의 유입보다는 간접투자자금(증권부문)의 유입이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대시킴.

3.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제고

○ 남북관계 경색은 기업의 장단기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차단할 것임.

- 단기적으로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북한 인프라 정비, 북한 노동력 교육·개발, 북한 경제의 시장화 촉진에 따른 이익 및 남북경협 제도화를 통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 증대 등의 실익을 상실

- 장기적으로는 남한 기업의 북한 내 활동 확대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북한시장의 선점효과를 상실,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제고할 것임.

4. 통일비용 부담 증대

○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경협의 침체는 통일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선지불하는 효과를 차단, 미래에 감당할 통일비용을 시기적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그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할 것임.

○ 더 나아가서는 통일 이후 남북간 제도통합 비용을 증대시킬 것임.

5. 기타 부정적 파급효과

- 남북관계 경색은 2007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「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」가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한국의 평화국가 이미지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임.
 - 동북아의 "평화"와 "공동 번영"을 실천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, 주변국의 대한국 지지를 유도하는 데 한계
-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될 경우, 남한 방문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방문 및 관광에 대한 수요 감소시켜 한국의 대외 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-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도 상실하게 됨.
 - 남북관계 경색이 남북경협을 저해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대남 긍정적 인식을 창출과 남북 주민간의 이질성 완화에 한계
- 남북 경색 관계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자연 탐승 및 위락 욕구 충족이 제한되고 있으며, 이산가족의 상봉의 기회도 제한
 - 개성 및 평양지역으로의 관광사업도 제한을 받음으로써 북한 지역 방문 또는 여행의 기회가 상실됨에 따르는 불만이 증대될 수 있음.

V. 결론

- 현재 남북관계 경색은 향후 남북경협의 전도를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.
 -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기업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.
-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장기간 침체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손실로 이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한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

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.

- 현재의 정책이 성공한다고 해도 현 정책에 의해 고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임.
-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이 해야 할 현 단계 최대의 과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대북 정책적 의지를 남북경협 스스로가 갖고 있는 논리와 잘 조화시켜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일임.
- 북한의 개방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.
 - 대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개방의 내용을 담고, 이의 수용을 권고하는 것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는 데 훨씬 유리
 - 현재의 경협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제안하고, 이에 따른 경제적 공동 이익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
 - 북한의 개방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부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.
- 남북 경협을 포함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실적 차원에서 훨씬 더 세련된 전략적 구상이 되어야 함.
 -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비핵화와 개방의 범위와 정도는 어떤 것인지, 남북경협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.
- 남북경협은 '사실상의 통일정책(de facto unification)'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함.
 - 남북간 국경을 초월하여 생산요소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자유방문과 관광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 창출을 위해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함.

-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수단임을 인식할 필요

○대북 관계에서 경제성·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, 효율성 추구의 대상에 대한 파악이 더 중요함.

-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·제의하는 모든 사안은 북한 체제의 존속 범위 내에서만 수용될 수 있을 것임.
-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음.

/(끝)